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2 - 1)
안전유형	보고

#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('22~'24)

2022. 1.



**관계부처 합동**  
[산업통상자원부]

## I. 추진배경

- 지속되는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감소하고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3차('22~'24) 어린이제품 안전 기본계획 수립
  - \*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3년 마다 수립

## II. 현황 및 당면과제

-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
  - (대상) 만 13세 이하 어린이\*를 위한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\*\*으로, 삼킴, 유해물질 등 위해요소가 많고, 유행에 민감하여 제품 출시가 빈번
    - \* 전체인구의 11%인 약 569만 명('21년 기준)
    - \*\* 완구 등 34개 품목으로 인증유지는 약 8.6만 건(생활용품 약 3.3만 건)
  - (최근동향)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('15.6) 이후에도 제품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,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
    - \* 어린이제품 안전사고(건수): ('15) 2.5만 → ('17) 2.6만 → ('19) 2.5만 → ('20) 1.8만
    - 전체 유통시장(16.2조원) 중 온라인 매출(3.4조원)이 급성장(연 12.6% ↑)하는 가운데, 업계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입제품의 비중(완구: 90%)이 높은 상황
- 그간의 성과 및 당면과제
  - (그간의 성과)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조사대상 중 부적합 제품 비중이 지속 감소('19년: 10.9% → '21년: 5.7%)
    - 영세기업의 시험·인증 비용을 지원('19년: 25개 → '21년: 90개)하고, 안전한 유통을 위한 협업체계(관세청/교육청) 및 인프라(위해상품차단시스템 등) 구축
  - (당면과제) 지속되는 물리적 안전사고를 방지하고, 구매대행·중고거래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
    - 지속적인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증대되는 업계 부담을 축소하고, 오프라인 위주의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·발전 필요

### Ⅲ. 제3차 기본계획 비전 · 목표

**비 전**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 
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

<b>목 표</b>	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시장 퇴출로 안전사고 실질적 저감	(안전사고 감소) 18,494건('20년) → <b>15,000건('24년)</b>
		(온라인 협의체) 15개사('21년) → <b>40개사('24년)</b>
		(기업지원) 90개('21년) → <b>500개('24년)</b>
		(안전교육) 7,000명('21년) → <b>20,000명('24년)</b>
		(안전기준) 유해물질 → <b>물리적 사고 저감</b>
		(안전성조사) 적발위주 → <b>법적 의무처벌 강화</b>

<b>1.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고 저감 중심 안전기준 강화</li> <li>② 안전 관리대상 확대</li> <li>③ 인증제품 유통 강화</li> </ul>
<b>2.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근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유통 관리체계 확립</li> <li>② 위해품목 집중 단속</li> <li>③ 유통 취약채널 관리</li> </ul>
<b>3. 기업·소비자 지원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</li> <li>② 기업 지원 확대</li> <li>③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</li> </ul>
<b>4.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</li> <li>② 시험인증 역량 강화</li> <li>③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</li> </ul>

### Ⅳ.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

- (안전사고 예방) 사고 저감을 목표로 안전기준 재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 확립
  -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을 대폭 재정비하고, 성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제품(소파 등)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상향
  - 안전한 제품의 유통관리를 위해 민·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(15개사 → 40개사)하고, 위해상품의 식별·추적을 위한 상품분류체계\* 개발·도입
    - \* 온라인 유통사들은 다양한 제품의 식별, 사후 추적 등을 위한 분류체계 도입 희망
- (불법·불량 제품 근절) 적발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·의무 강화로 전환
  -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,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(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)하고,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의무(리콜제품 유통금지, 인증정보 공개 등) 부과
  -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(인증 회피, 반복 위반 등)을 집중 단속하고, 유통 취약채널(구매대행, 중고거래, 재래시장 등)에 대한 안전수준도 제고
- (기업·소비자 지원)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
  -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(90개사 → 500개사)하고, 제품 출시 전 기업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·대처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\* 보급
    - \* 기업이 제품 정보를 설계 단계에서 입력하여 위해도, 안전기준 등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·보완
  - 어린이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(연 7천명 → 2만명)하고, 메타버스 체험관, 인플루언서 활용 등 흥미 위주의 제품안전 콘텐츠 제공
- (인프라 확충)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시험·인증 역량 강화
  -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알림장 앱, 채팅봇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, 안전이슈 실시간 파악을 위한 AI 기반 정보 수집 시스템\* 구축
    - \*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, 맘카페 등을 통해 안전 이슈제품을 선제적으로 파악
  - 시험·분석 역량을 강화(분석장비 도입 지원, 검사지침서 보급 등)하고,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'어린이제품안전센터' 설립(제품안전관리원 내)